18개 상임위 '與 독식'?…통합당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

한나라당, 18대 172석 과반때도 법사위원장 野에 양보
상임위원장 독식 선례 선거 지면 '毒'…자충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수에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전부 포기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통합당이 결국 실리를 택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강수를 놓자 적지 않게 당황했던 민주당은 다시 강경돌파 수순을 예고했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합의 선출 전례는 이번에 깨졌다. 21대 이후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명분이 만들어진 셈이다. 협치는 더욱 요원해지고 정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충북 한 사찰에서 일주일 넘게 칩거 중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현재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다 가져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내 초선의원 다수가 주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여야 대치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이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의 위헌·위법 요소와 세부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본회의 의결이 쉽지 않아 다수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법사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아왔다. 한나라당이 172석, 민주당이 87석을 얻어 21대 보다 여당 쏠림이 더했던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없던 시절이라 법사위 권한이 더욱 막강해 '법사위가 상원이냐'는 푸념이 나오던 시절이기도 하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야당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의석수로 밀어부치는 여당에 개원 초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면 회기 내내 끌려다닐 것이란 우려가 전(全) 상임위원장 포기의 배경이란 분석이다.

PK지역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쏠림은 익히 예견했지만 원구성 단계부터 이렇게 독주할 줄은 몰랐다"며 "야당을 대화 상대가 아니라 적으로 규정한거다. 점령군 행세하며 퇴로조차 주지 않고 백기투항 하라는 식"이라고 힐난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법사위를 야당에 주는 전통은 열린우리당이 만들었는데, 그 전통과 관례를 스스로 깨고 시혜를 주듯 받아먹으라고 던지면 야당이 받을 수 있겠느냐"며 "야당으로선 (18개 전 상임위원장 포기가) 어쩔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런 식의 길들이기를 통합당이 받아먹으면 (여당에서) 또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의 강경한 입장에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22일 곧바로 "협상이 아니고 양보할 일도 아니다"고 재차 야당을 압박하며 강경돌파로 선회했다.

민주당이 재차 상임위원장 선출 수용을 압박하면서 여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번 상임위 독식은 향후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율 교수는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177석을 가지고 무조건 밀어부칠 것 같다"며 "100년 간 집권한다면 걱정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고 했다. 21대 이후 야당이 다수당을 수복하면 민주당과 협치는 없다는 공개적 경고인 셈이다.

21대 첫 국방위 전체회의 통합당 보이콧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빈자리(왼쪽)가 보이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진행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소병철 의원, KBS에 순천방송국 폐쇄 계획 철회 요구

시청자 알 권리 박탈…지역간 정보 불균형 심화 우려
KBS 스스로 공적가치와 공영방송 역할 훼손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과 함께 최근 성명서를 내고 KBS가 순천방송국 폐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순천방송국의 자체적인 TV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송출기능을 대도시 광역 거점센터인 광주에 통합하고 순천방송국에는 라디오, 보도(IP), 수신료 징수, 문화센터 운영 등 일부 업무만을 남기는 변경허가 건을 방통위에 신청했다.

순천 시민들은 KBS가 사실상 순천방송국을 단순한 중계시설로 전락시키고 결국 폐쇄수순을 밟으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순천 지역위원회 주관으로 '공영방송인 KBS는 지역 시청자들의 주권을 해치는 지역방송국 폐쇄를 철회하라'는 궐기대회를 열고 "이미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시간이 급하지만, 다른 지역 당선인들과 협조하여 연명으로 폐쇄철회 촉구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KBS 순천방송국은 순천지역을 비롯해 여수, 광양, 고흥, 일부 보성 지역과 경남 하동, 남해 일부를 관할하는 방송국으로 총 85만 명의 시청자가 시청하고 있다.

또한 이들로부터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수신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시청자들이 분담하고 있는 수신료의 공적가치와 시청자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는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를 납부하는 순천시민들의 시청자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은 이유다.

순천시민들은 "지역의 다양한 철학이 담긴 목소리를 배제하고 지역의 언로를 차단하면서 시청자에게 무슨 낯으로 수신료를 요구할 것이냐"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 방송국이 사라지면 순천 시민들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지역 뉴스정보로부터 소외당하게 된다. 이는 지역 간 방송의 불균형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KBS는 순천방송국 폐쇄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KBS의 공적 책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문대통령, 박원순·이재명과 수도권 방역 논의

2차 대유행 우려 상황 엄중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비롯해 수도권 밖으로 확산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3일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심의에 앞서서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16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지 약 석 달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고,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는 국무회의 참석 멤버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상황에 대해 토의가 이뤄진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2차 대유행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올 만큼 엄중한 상황이다.

서울 신규 확진자수는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132명으로 평균 19명이었고, 14일부터 20일까지 105명으로 평균 15명꼴이었다. 현재 서울 병상 현황은 전체 913병상 중 490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53.7%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주간 지역사회 연쇄감염이 이어져 수도권 밖으로 확산되고 있고,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유입 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 앞서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상황을 점검,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대책을 당부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재차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